

보도	2025.7.22.(화) 조간	배포	2025.7.21.(월)
담당부서	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 김재갑 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 이동재 (02-3145-7260)

설계사 정착지원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겠습니다

- 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(잠정)

I 배 경

- 최근 언론 등을 통해 GA(법인보험대리점)의 설계사 정착지원금* 지급 경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

* 보험회사나 타 GA 소속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으로, 이직 시 전 소속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짐

-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설계사의 실적 압박*으로 이어져 부당 승환** 양산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,

* ①정착지원금 지급액 증가 → ②신계약 목표실적 상향 → ③실적 부담 → ④보험계약 부당승환·특별이익 제공·작성계약(허위·가공계약) 등 유도

**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,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(소위 '보험 갈아타기')

- 아울러, 설계사 이직이 빈번해짐에 따라 설계사 및 모집계약에 대한 관리·통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이에 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를 살펴보고,

- 무분별한 정착지원금 살포, 부당승환 양산 등 시장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

II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

- **(개요)** GA업계 자율규제로 마련된 「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」에 따라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'24.3분기부터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*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.

* 홈페이지(www.igaa.or.kr) 접속 → '정착지원금 정보공시' → '정착지원금 정보공시조회'

<참고>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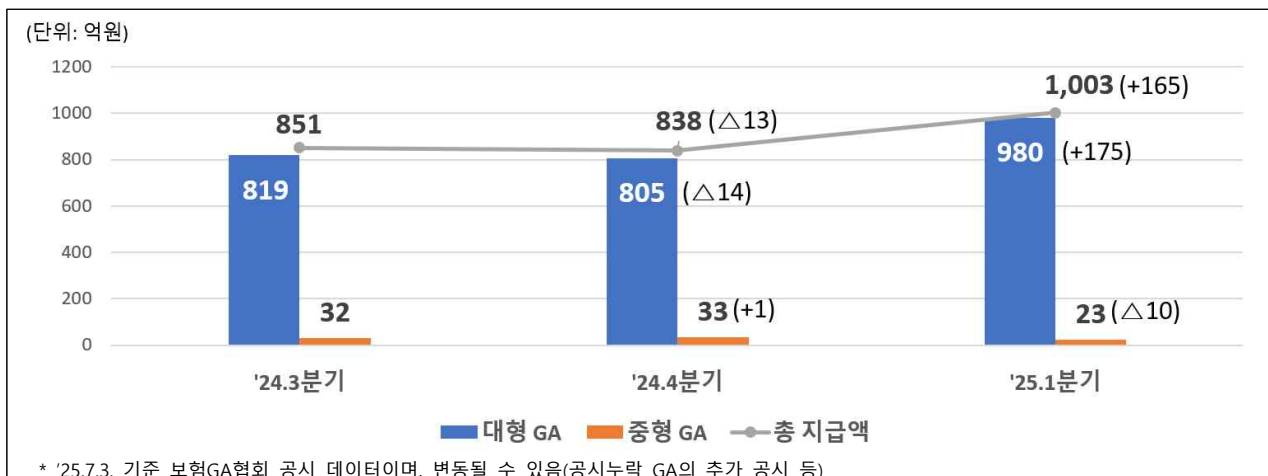
-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과열로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,
- GA의 정착지원금 지급 관련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업계 자율 「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*」을 마련('24.9.3. 시행, 세부내용 <붙임1> 참조)

* ①정착지원금 운영, ②본사 통제 및 사후관리, ③공시 등 3개 부문별로 합리적인 운영방식 제시

- **(지급 현황)** '25.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,003억원으로 직전 분기(838억원) 대비 165억원 증가(19.7% ↑)하였습니다.

-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('24.4분기)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다소 감소하였다가 금년('25.1분기) 들어 크게 반등하였으며,
- 특히, 대형 GA(설계사 수 500인 이상)의 지급액이 크게 증가('24.4분기 805억원 → '25.1분기 980억원, +175억원)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>



Ⅲ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검사 결과

1 개 요

-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·특별이익 제공·작성계약(허위·가공계약) 등을 양산*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.

* ①정착지원금 지급액 증가 → ②신계약 목표실적 상향 → ③실적 부담 → ④보험계약 부당승환·특별이익 제공·작성계약(허위·가공계약) 등 유도
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, 부당승환 의심 계약건수* 등이 가장 많은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.

* 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 소멸된 계약이 존재하는 신계약건수

2 검사 결과

※ 최근 2년내('23.6월~'25.6월)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정착지원금·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를 정리

-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,984건(1개사 평균 426건)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으며(「보험업법」 제97조 위반),
- 이를 통해 3,583건(1개사 평균 512건)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.

< 최근 2년내('23.6월~'25.6월) 부당 승환계약 체결 현황(잠정) >

(단위: 명, 건)

회 사	A사	B사	C사	D사	E사	F사	G사	합 계 (평균)
관련 설계사 수	53	175	20	20	83	23	34	408 (58)
신계약	583	1,278	100	110	616	118	179	2,984 (426)
소멸 기존계약	735	1,529	122	119	794	111	173	3,583 (512)

□ 해당 설계사들은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, 더 나아가 보험산업의 신뢰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.

① 해당 설계사들은 **본인이 직접 모집**하였던 **보험계약을 해지**시키고, **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**시켰습니다(전전).

- 본인이 직접 모집하였기에 기존계약의 존재 여부 및 상품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*하여 알리지 아니하고,

* 신계약 체결 전·후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이 존재하는 경우,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에게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면 부당승환으로 간주

- 소위 ‘보험 갈아타기’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직·간접적인 피해*를 야기하였습니다.

* (예) ①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

②신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 상승

③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(예: 암보험 가입 시 90일 후 보장 개시) 다시 적용(보장 단절)

② 해당 설계사들은 **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**을 집중적으로 유발하였습니다.

-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, 새로운 GA로 이직한지 180일 이내 발생한 건이 43.1%*를 차지하는바,

* 부당승환 관련 신계약 2,984건 중 1,286건(43.1%)이 새로운 GA 이직 후 180일 이내 체결 (참고로, 1년 이내 체결 64.3%, 2년 이내 체결 90.4%, 3년 이내 체결 98.8%)

- 고객의 필요가 아닌 설계사의 필요(실적)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
* 고객의 필요에 의한 신계약 체결이라면 부당승환이라 하더라도 이직 초기에 집중될 이유가 없음

③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**특별이익 제공** 및 **작성계약**(허위·가공계약) 등도 **함께 야기**하였습니다.

- 부당승환 대상 계약자(신계약)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,

-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‘실적 지상주의’ 및 위법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보여주었습니다.

IV 향후 계획

1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GA업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

-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(선지급률 및 미환수율, 설계사 정착률 등)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*하는 한편,

* (참고) 언론 등을 통해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우려가 제기된 3개사에 대해 면담 既 실시('24.5~6월)

-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*를 실시하겠습니다.

* (예) 정착지원금 살포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는 최근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실시

2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시장 규율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.

- 기관제재(GA 업무정지 등)를 강화*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,

* 그간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된 측면

- 그간의 관행적 제재 감경, 과태료 상한금액 적용 등을 배제*하여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시장규율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입니다.

* 동일 위반행위로 제재된 선례가 있는 경우, 위반행위가 조직적이거나 경영방침에 기인한 경우에는 감경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

<참고>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

- GA 및 설계사의 위법·부당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전제재 및 기관·신분제재 부과
 - 금전제재: 부당 승환계약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「보험업법」 제209조)
 - 기관·신분제재: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(「보험업법」 제86조 및 제88조 등)

3 GA의 정착지원금·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.

- GA 정기검사 시 정착지원금 운영 및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,

- 「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*」에 「정착지원금 운영 모범 기준」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겠습니다.

* '22년부터 대형 GA(설계사 수 500명 이상)를 대상으로 실시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1 「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」

※ GA의 정착지원금 지급 관련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업계 자율 「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」을 마련('24.9.3. 시행)

가. 개 요

-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과열로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제기
 - 이에 따라 GA업계 자율로 「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」을 마련하고, '24.9.3.부터 소속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시행

나. 주요 내용

- ①정착지원금 운영, ②본사 통제 및 사후관리, ③공시 등 3개 부문 별로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제시
 - **(정착지원금 운영)** 수수료 지급 규정 외에 별도로 GA 자체적인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,
 - 계약유지율, 불완전판매율, 민원발생률 등을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
 - **(본사 통제 및 사후관리)** 운영 주체는 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점 차원에서 운영하더라도 본사가 통할·관리(본사 승인 등)해야 하며,
 - 정착지원금 수령 설계사의 이상징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
 - **(공시)**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, 선지급율 및 미환수율 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설계사의 13월차 정착률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

붙임2 관련 법령

□ 「보험업법」

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(후략)

제88조(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) ①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2~6. (생략)

7.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
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~4. (생략)

5.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(이하 이 조에서 “기존보험계약”이라 한다)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

6~11. (생략)

② 삭제

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

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(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~⑥ (생략)

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제4호,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
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·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·경고·문책의 요구
2.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3. 임원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)의 해임권고·직무정지
4.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

제136조(준용) ① 국내사무소·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보험회사”는 각각 “국내사무소”·“보험대리점” 또는 “보험중개사”로 본다.

제209조(과태료) ①~⑥ (생략)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~6. (생략)

7.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.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7의2~9. (생략)

10.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(후략)

□ 「보험업법 시행령」

제43조의2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(이하 “기존보험계약”이라 한다)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
2.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, 손해보험상품,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

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.

1.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
2. 기명날인
3. 녹취
4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

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

제44조(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·고지사항) ①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“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보험료,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
2.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
3.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
4.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
5. 보험 목적
6.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

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